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징 계 및 소 청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84호, '20.1.29. 일부개정, '20.7.30. 시행)됨에 따라 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비위의 정도 및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 제한 절차 마련(안 제18조 신설)

- 1) 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통보 등 의무 신설
- 2) 조사 및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위반 시 문책 규정 신설
- 3) 관할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

나. 인사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8조제2항 일부 개정)

다.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일부 개정)

-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 2) 부작위·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 3)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라.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5조 제4항 일부 개정)

마.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인사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6조 제1항 일부 개정)

- 1)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제6항내지제8항, 제6조의2 신설)

- 1)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 2)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혐의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장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4)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이나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5)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징계등 혐의자, 대리인, 징계의결등 요구자, 감사원, 증인, 피해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피해자·혐의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사위원회의 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전화,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제8조제2항 중 “근무성적”을 “혐의 당시 직급”으로, “공적”을 “징계등 요구의 내용”으로, “늪우치는 정도”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으로, “징계등 요구의 내용”을 “공적”으로, “그 밖의 정황”을 “늪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확인요

청을 받은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 및 수사기관은 제1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사 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6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인사위원회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법 제69조의4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인사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

한다.

제4조(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혐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성명 (현재) (혐의 당시)			
2. 비위유형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행위를 함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나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성적(최근 2년)	(년 월)	점, (년 월)	점,			
	(년 월)	점, (년 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
금 부과결 요구권자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③ (생략)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④ ----- ----- -----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등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u><단서 신설></u>	제6조(징계등의 의결) ① ----- ----- ----- ----- ----- ----- ----- ----- ----- ----- ----- ----- ----- ----- ----- ----- -----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②~⑤ (생략)

<신설>

<신설>

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징계등 혐의자, 대리인, 징계의결등 요구자, 감사원, 증인, 피해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혐의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설></u>	<u>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u>
<u><신설></u>	<u>제6조의2(인사위원회의 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u> <u>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 기류, 휴대전화,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u> <u>2. 흉기 등 위험한 물건</u> <u>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 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u> <u>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u> <u>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u> <u>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 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 위</u>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생략)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 협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
---.

제18조(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 및 수사기관은 제1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6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인사위원회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법 제69조의4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

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9